

균발위, 국가균형발전 정책 뭐가 문제인가

호남 등 낙후지역 '선택과 집중' 배제 ... 효과 의문

'5+2경제권' 영남 편중 개발 초래 남해안 선벨트 '4대 벨트'로 몰타기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을 3대 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낙후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9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회 2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남해안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총회에 참석,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나눠 국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초광역개발권'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남해안 선(Sun)-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 벨트 등 4대 벨트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 선-벨트는 부울권(부산·울산), 남중권(진주·사천·거제·여수·광양), 서남권(완도·신안·해남)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서해안 산업벨트는 경기·아산만권, 새만금-군산-

장항권, 목포-무안권으로 묶어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울산-포항-동해권, 강릉-속초권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남북교류·접경지역 벨트는 한강하구-개성-해주권, 휴전선 접경지역, 설악-금강권을 묶어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밝힌 바 있는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성과 분석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연계사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의결 집행 기능을 가진 추진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3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기초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150개 개발사업을 30여개로 통합·조정, 포괄적 지원을 통해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7조6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바꾸고 타 회계 사업의 균특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9~10조원 내외로 재정 규모를 확대시키겠다고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분권적 지역개발과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포괄보조금제 등을 도입하고 개발 자치권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교부세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집행적 성격의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최 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낙후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효과의 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4대 벨트' 개발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국을 모두 개발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다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도 영남은 2개(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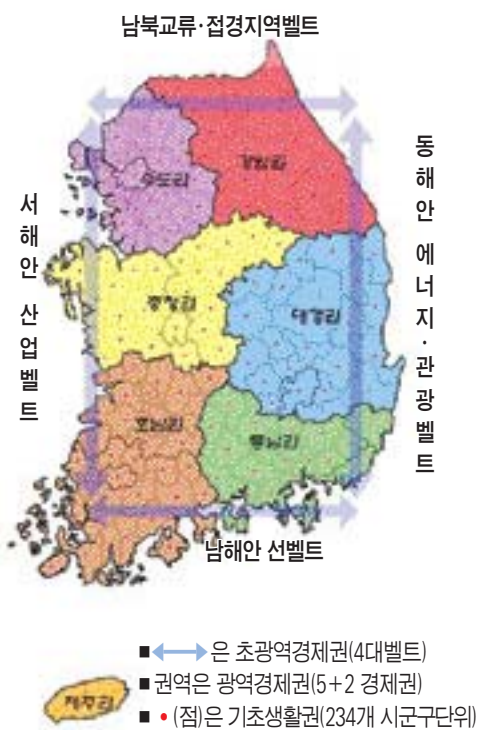
동남권)인데 반해 호남은 1개(호남권)에 불과, 호남의 경제적 낙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광산·을)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진행하면서 낙후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실시해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최 위원장이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전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9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상을 청취했다. 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권) 의원과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연구 모임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좋은아빠되고 싶다면, 무좀부터 고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무좀 곰팡이균
바이엘 카네스텐 크림으로 시원하게 잡으세요!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0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카네스텐 크림은 클로트리마졸 성분을 함유하여 무좀, 기생충의 원인인 곰팡이균에 강력하게 작용, 무좀을 시원하게 잡아드립니다.

문의전화 02-829-6600, 6946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무좀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자극성'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는 상담하십시오.

www.canesten.co.kr

카네스텐 크림
광고문의전화 : 965-0900

“수도권 개발 이익 지방에 돌려줘야”

최상철 균발위장 '남해안시대 연구모임 창립총회서 강조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9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은 남해안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회합은 물론 여야 상생, 국가정책개발 등 정책 연구를 위해 28명의 여야 의원들로 꾸려졌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을 지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김태호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고문으로

조원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정하고 국세, 지방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돌려줘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고문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와 함께 남해안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해양 조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을 관광도시 건설과 해양산업 등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0

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정찬웅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5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상철 균발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이라는 특별 연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며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을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수도권에 비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0

J프로젝트, 골프장에 발목 잡히나

환경부 "골프장 수 너무 많다" 승인 보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지나치게 골프장이 많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골프장 수가 너무 많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골프장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며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개발계획안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도와 협의가 벌이고 있는 환경부는 최근 'J프로젝트 예정지구 내에 건설예정인 골프장의 수를 최대한 줄일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골프장이 많으면 철새의 이동통로와 먹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J프로젝트 내 5개 예정지구 가운데 삼호지구 3개, 구성지구 9개, 초송지구 10개 등 3개 지구에 모두 22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전남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업을 일괄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만, 골프장 수를 줄이는 문제는 3개 예정지구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도민(SPC)들과 협의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각 지구에서 1개씩 골프장을 줄여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지만 각각의 SP가 모두 골프장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쉽사리 협의를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골프장 수가 감소할 경

우 개발계획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인 만큼 전체적인 개발일정이 지연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전남도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최근 협의를 통과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수 감소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3~4개 정도의 골프장을 줄이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SP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예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검토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관가름나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